

2018.11월 제2호

BLOCKCHAIN 동향과 이슈

〈암호화폐 중심으로〉



CONTENTS

주요 이슈

주요 정책 및 산업 동향

외국의 정책 및 산업 동향



BLOCKCHAIN 동향과 이슈

〈암호화폐 중심으로〉

2018.11월 제2호

CONTENTS

주요 이슈	2
주요 정책 및 산업 동향	7
외국의 정책 및 산업 동향	13

주요 이슈

- 법원, 거래소 은행상대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최초 인용
- 스테이블 코인 ‘춘추 전국 시대’ , 대안 코인 부상

주요 이슈

■ 법원, 거래소 은행 상대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최초 인용

- 10.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구회근)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이즈((주)웨이브스트링)’가 NH농협은행을 상대로 낸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

- 9월경 : 코인이즈의 주거래은행 NH농협은행이 금융위원회의 ‘가상통화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거래 종료하겠다고 하자, 코인이즈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금정지조치금지 가처분 신청
- 10.29일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입금정지조치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

- 이는 법원이 정부의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규제정책에 제동을 건 최초 법적 대응 사례
-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비전의 김태림 변호사는
 - 암호화폐거래소는 기본적으로 은행과 체결한 예금계약에 따라 계좌에 자유롭게 돈을 입출금할 권리가 있다며, 은행이 정당한 근거 없이 입금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
 - 법원은 은행이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입금정지조치를 하는 것이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치임을 확인해 준 것
 - 법적인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규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음을 설명

※ 참고 : 1) 이데일리 10.29일자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54566619378168&mediaCodeNo=257&OutLnkChk=Y>

2) 한경닷컴 10.29일자 <http://gametoc.hankyung.com/news/articleView.html?idxno=49617>

■ 스테이블 코인 '춘추 전국 시대', 대안 코인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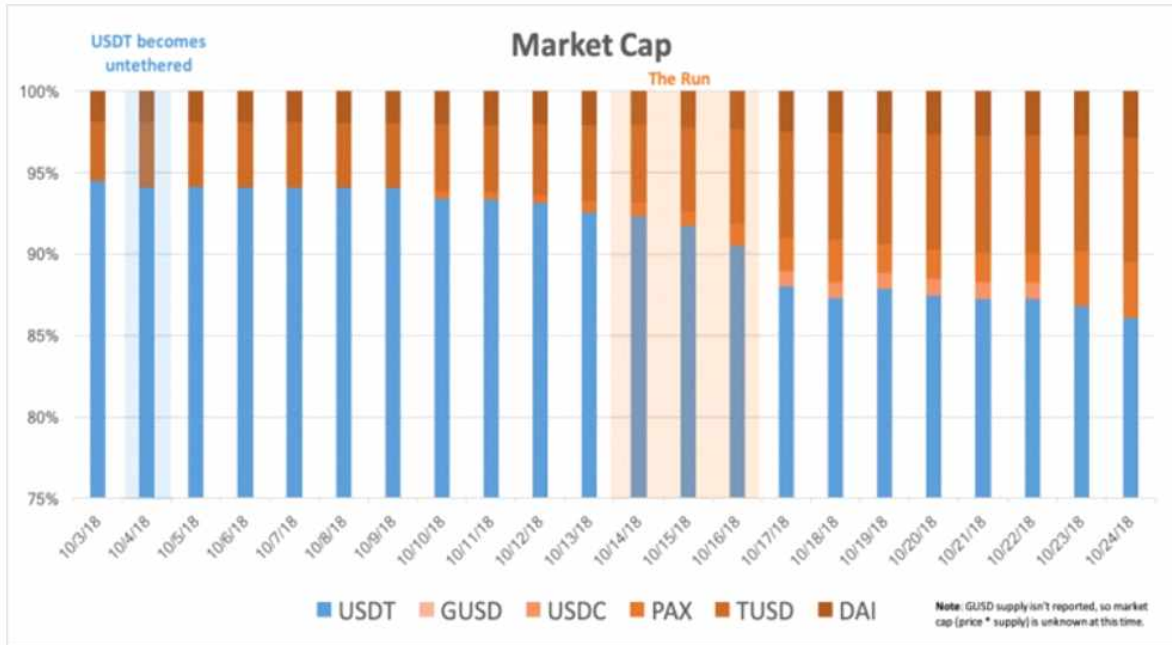
- 최근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USDT)를 중심으로 대안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증가하며 '춘추 전국 시대'를 열고 있음
- 업계 1인자는 2014년 출시한 테더(USDT)로, 11월 2일 기준 시총 17억 6,380만 달러(약 2조원) 수준으로 암호화폐 전체 시총 8위를 차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 점유율은 90% 이상에 달함
- 특히 24시간 거래액 규모가 3조 6,000억원으로, 비트코인에 이어 2위이며 비트코인 일 평균 거래액 60%를 차지하는 만큼 상호가격 영향 관계도 높은 편임

※ 출처 및 참조 :마켓캡 <https://www.blockchainhub.kr/coin/coin.php>

- 지난해 12월에는 메이커다오(Maker DAO)가 DAI를 출시
 - DAI : 대표적인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더리움을 담보화폐로 활용
 - Maker와 DAI 두 가지 발행 토큰 중 DAI 토큰이 스테이블 코인 역할을 하며 환율 변동에 따라 DAI의 공급량을 조절, 가격 안정화를 이룸
- 2018년에는 스테이블 코인 열풍이 더욱 고조되어 3월 트루USD가 출시된 데 이어 4월 베이스(Basis)가 등장, 5월에는 골드만삭스와 중국 검색 엔진 바이두가 투자한 미국 블록체인 기업 서클(Circle)이 등장
- 10월은 오케이 엑스가 팍소스스탠더드토큰(PAX), USD코인(USDC), 트루USD(TUSD), 제미니달러(GUSD) 등 4종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 소식을 전했으며, 후오비도 오케이엑스와 같은 스테이블 코인 4종을 상장한다고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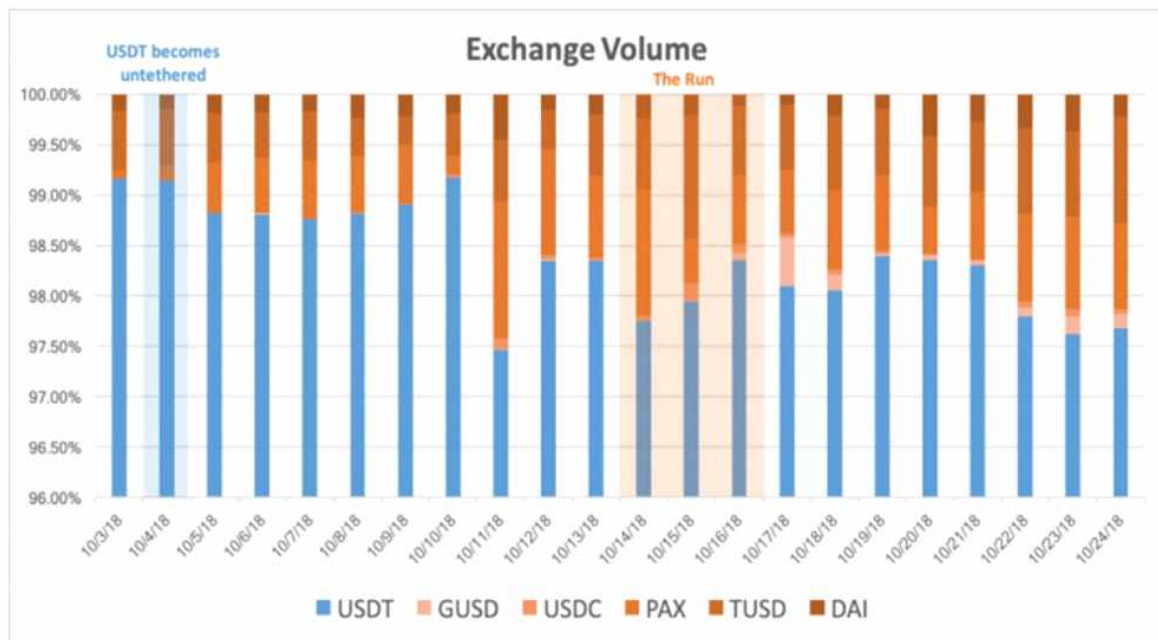
주요 이슈

< 주요 스테이블 코인 시총 비중 추이 >



※ 출처 : Talking Data

< 주요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 비중 추이 >



※ 출처 : Talking Data

- 10.15일 테더 급락이후 전체 스테이블 코인 중 USDT 시총 비중은 감소세가 지속. 해당 비중이 기존 95%대에서 10월 말 80%초반까지 감소한 가운데 같은기간 TUSD, USDC등 비중이 비교적 크게 증가
- 거래량 비중에도 비슷한 변화로 10월 중순 이후 USDT 거래량 비중 감소세가 이어진 반면, USDC를 비롯한 대안 스테이블 코인 해당 비중은 증가세를 나타냄
-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대안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으로 향후 업계 구도가 기존 테더 독점 체제에서 다수 코인간의 상호 경쟁 구도로 바뀔 것으로 예상
 - 주요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법정화폐 담보형(USDT, TUSD), 암호자산 담보형(DAI, BTS), 무담보형(BASIS, CARBON)등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스테이블 코인은 보다 다양한 방식의 코인 발행 및 사용처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충족, 화폐 대안으로서 입지를 구축하려 할 것이라 업계 전문가들은 전망

주요 정책 및 산업 동향

[2018.10월]

한국블록체인협회

■ 한화시스템, 이더리움 기업 연합 'EEA' 회원사 가입

- 1일 한화시스템은 글로벌 기업과의 정보공유와 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워킹그룹 참여를 통해 이더리움 기술의 글로벌 표준을 구축한다는 방침
- ※ EEA(이더리움 기업연합) : 'Enterprise Ethereum Alliance'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더리움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형 블록체인 솔루션을 공동개발하기 위해 출범한 글로벌 단체.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JP모건, ING등 500개의 회원사가 가입.
- 국내 대기업 : 삼성SDS, SK텔레콤, 한화시스템

■ 빗썸, 자체토큰 발행 추진 가능성

-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자체토큰 발행을 추진
- 거래량에 따라 자체토큰을 지급하는 거래소가 인기를 끌며, 빗썸 사용자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자체토큰 발행을 검토

■ 한국블록체인협회 'ICO클럽' 발족

- 1일 회원사가 주축이 된 '암호화폐공개(ICO)클럽'을 발족
- 코인 유통시장인 암호화폐거래소가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이었다면, 이번 ICO클럽 발족은 블록체인 산업에서 또 하나의 중심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
- 초대회장 : 이경준 의장(ICX, 시가 총액 37위)

■ 박원순 "서울, 블록체인 선도도시 만들겠다"

- 박원순 서울시장의 3일 스위스 소도시 '추크'(Zug)에서 서울의 블록체인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발표
- 산업 클러스터 조성 : 기업 200여개 (개포, 마포)
- 블록체인 서울펀드 조성(약 1천억 원) : 유망한 창업기업에 투자 예정(2022년까지)

■ 중기부, 암호화폐거래소 7곳 벤처인증 '일단 유지'...취소 여부 논의

- 3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신규 벤처인증을 중단, 이미 벤처인증을 받은 7개 암호화폐거래소의 벤처인증은 즉각 취소하지 않고 법제처의 자문을 거쳐 결정할 예정

■ 원희룡 지사 “블록체인 산업 개혁 필요.ICO 점진적 허용할 것”

- 원희룡 제주지사가 10일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은 암호화폐 투기를 막고 행정편의는 달성했으나,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지적
- ICO에 대해 유형별로 세분화해 허용해 나갈 것
: 기관 투자자의 프라이빗 ICO 투자 허용 → 제한적 유형의 퍼블릭 ICO 허용

■ 최종구 금융위원장, “암호화폐거래소, 실명계좌 위해 은행 설득 필요”

-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거래소가 실명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밝힘
- 해외에서도 ICO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거나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
- 정부도 블록체인 산업의 유망성을 부인하지 않지만, 가상통화 취급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

■ 빗썸, 싱가포르 ‘BK글로벌 컨소시엄’에 매각

- 12일 디스트리트와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내 1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이 싱가포르 ‘BK글로벌 컨소시엄’에 매각
- 빗썸 거래소를 기반으로 기존 결제 체계의 수수료를 대폭 낮춘 블록체인 ‘e커머스 결제시스템 구축’,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운용’ 등으로 거래소의 잠재력을 극대화

주요 정책 및 산업 동향

- BK 컨소시엄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티씨코리아홀딩스 지분 50%+1주 매입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 계약금으로 1,000만달러(약113억원)를 지불

■ 금감원장, 암호화폐 거래 “규제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

-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규제를 만드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 빗썸 DEX(탈중앙화 암호화폐거래소) 오픈

- 15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이 원루트네트워크(RNT, 시총 205위)와 함께 이더리움 기반으로 구축한 탈중앙화 거래소(DEX) ‘빗썸 DEX’를 오픈

※ 빗썸 DEX(Decentralized Exchange Service) : 이더리움 기반의 탈중앙화 거래소

■ 올스타빗, 개인정보유출 사고 관련 사과문 공지

- 올스타빗은 18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사과문 게재
 - 이전부터 임직원 및 회원들의 자산과 정보를 빌미로 금전요구
 - 내부조사결과 회원들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 사건 관련 증거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의뢰, 법률적인 대응을 진행

■ KISA, 내년 6개 분야서 블록체인 공공시범사업 확장

- 19일 전자신문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내년부터 6개 분야에서 블록체인 공공 시범사업을 확장한다고 밝힘
 - 블록체인 공공시범사업 : 국내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 목적
 - 관계부처 : 관세청, 농림부, 국토부, 선관위, 외교부, 해수부

■ 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암호화폐 IEO지침 발표

- 19일 암호화폐와 관련한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 거래소 공개) 지침을 세계최초로 발표
- ※ IEO(거래소 공개) : 거래소가 암호화폐 자금을 모집하고 공개까지 해주며 해당 거래소에 상장까지 시켜주는 시스템

■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초기 파트너사 공개

-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22일 자체 개발한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Klaytn)’이 내년 1분기 메인넷 오픈을 앞두고 초기 서비스 파트너사 9곳을 공개
- ※ Klaytn 초기 서비스 파트너사 (9곳)
 - ① [게임] 위메이드트리 ② [게임] VETTA ③ [뷰티] 코스모체인 ④ [푸드] 힌트체인
 - ⑤ [금융] 레이온 ⑥ [스포츠] 스포츠플렉스 ⑦ [웹툰·웹소설] 픽션네트워크
 - ⑧ [데이터] 에어블록 프로토콜 ⑨ [헬스케어] 휴먼스케이프

■ 금융당국, “가상통화펀드, 법 위반 소지 있으니 유의해야”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가상통화펀드’로 불리는 상품에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 당부
-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조치를 검토할 예정

■ 지닉스, 2호 크립토 상품 출시 취소...1호 투자자 보호

- 지닉스(Zeniex)가 무기한 연기 조치된 2호 상품 출시를 전면 취소, 1호 상품의 투자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외 거래소 추가 상장을 추진 중
 -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일명 가상통화펀드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이라는 자료를 통해 ‘ZXG크립토펜드 1호’의 위법성을 경고한 바 있음
- ※ ZXG크립토펜드 : 투자자료부터 가상화폐를 모아 가상화폐공개(ICO)등에 운용하고 만기에 수입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
- 지닉스 측은 지닉스 플랫폼을 통해 펀딩이 이루어졌으나 해외운용사가 모집과 토큰발행을 하였기에 토큰의 소유권이 지닉스에게 없고, 10억원에 미달하는 자금 모집 규모로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투자증권에 대한 신고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해명

■ 한국블록체인협회, “가상화폐거래소 신규계좌 발급 가능” 금융위원장 발언 환영

- 30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밝힌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은행권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환영 의사 밝힘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신원확인절차 및 자금세탁방지 장치확보가 전제된다면 신규계좌발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음

외국의 정책 및 산업동향

[2018.10월]

- 미국
- 중국
- 일본
- EU
- 러시아
- 프랑스
- 몰타

한국블록체인협회

미 국

■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몰리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 1일(현지시간) 미국 포춘지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최근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블록체인 업계 진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2012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앨빈로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가 최근 블록체인 스타트업 코비네트워크(Covee Network)에 합류
- 코비네트워크 CEO(마르셀 디츠(Marcel Dietsh)는 경제학계 권위자들이 블록체인 업계에 보이는 관심은 그만큼 블록체인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밝힘
 - 올리버 하트 : '프리즘 그룹' 합류(블록체인 경제 및 거버넌스 디자인 업체)
 - ※ 올리버 하트 : 201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하버드대 교수
 - 에릭 매스킨, 크리스토퍼 피서라이즈 : 크립틱 랩스(Cryptic Labs)합류 (블록체인 연구기관)
 - ※ 에릭 매스킨 : 200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프린스턴고등연구소 교수
 - 크리스토퍼 피서라이즈 : 2010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 런던정치경제대학교 교수

■ 와이오밍주, 블록체인 스타트업 친화형 은행 설립 추진

- 2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의원들이 최근 상업은행의 암호화폐 업무를 촉진할 수 있는 법안을 상정
- 전통적 상업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제한하는 이유가 규제라는 점을 착안,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암호화폐 은행설립을 허가

■ CFTC, 암호화폐 산업 자율 규제 강조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기술자문위원회(TAC)가 암호화 자산 보호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및 자율규제 필요성을 강조

■ 최대 외환 중개상, 암호화폐 CFD 상품 출시...영국,호주 대상

- 2일 PR뉴스 전문 플랫폼 글로브뉴스와이어에 따르면, 미국 최대 외환 중개회사 FXCM이 영국과 호주 지역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암호화폐 CFD(Contracts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 상품거래를 출시한다고 밝힘

※ CFD(차액결제거래) : 주식, 주가지수, 통화 등 다양한 기초자산 가격변동에 따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일종의 장외파생상품

■ 유타주, BTC ATM결제 등 적극 도입

- 3일 유타주 현지 미디어 Ksl.com에 따르면, 미국 서부에 위치한 유타(Utah)주 곳곳에 비트코인 ATM이 총 12개 개설되어 운영하고, 15개 이상의 업체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
- BTC유타에 따르면, 상인들이 거래 시 수수료가 0에 가깝고, 결제내역 위조 등의 사기 가능성이 없기에 암호화폐를 선호한다고 밝힘

※ BTC유타 : 유타주 소재 비트코인 지지단체

■ 조셉 영, “코인베이스 기업가치 1년간 4배 ↑, 낙관적인 전망 방증”

- 유명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Joseph Young)이 3일 트위터를 통해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의 기업가치가 하락장 세에도 불구하고 1년전 16억 달러에서 4배나 증가한 80억 달러가 된 것은 놀라운 일”이며, 이는 “투자자들과 벤처캐피털들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을 전망한다는 방증”이라 밝힘

■ SEC, CBOE BZX Exchange 규정 변경 제안 및 BTC ETF 2건 거절

- 5일 새벽 미국증권거래위원회(CEC)자료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BZX거래소가 비트코인 ETF출시를 위해 제안한 규정 개정과 BTC ETF 상품인 'GranitesShares BTC ETF'의 출시 신청을 거절

■ 미 하원 의원, 블록체인 촉진법안 발의

- 6일 이더뉴스에 따르면, 미국 하원 의원 도리스 마츠이(Doris Matsui)와 브렛 거스리(Brett Guthrie)가 '2018 블록체인 촉진법안(HR 6913)'을 의회 발의

※ 2018 블록체인 촉진법안(HR 6913)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
- 블록체인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정의와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혁신 자원

■ 캘리포니아, '유가증권 정보 블록체인 보관 허용' 신규 법안 제정

- 11일 암호화폐 전문 이더뉴스에 따르면, 최근 제리 브라운(Jerry Brown) 미국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가 회사 기록 및 정보를 블록체인 상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신규 법안을 제정
- '기업의 유가증권 정보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록되고 유지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

■ 나스닥, 토큰 증권 플랫폼 설립 추진

- 15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나스닥 거래소가 토큰 증권 플랫폼(Tokenized Security Platform)설립을 추진 중이며, 이를통해 블록체인 프로젝트팀들이 미국 법률 환경에 적합한 시큐리티토큰공개(STO, Security Token offering)를 진행할 수 있음을 설명

■ CFTC위원, “예측 및 베팅 플랫폼 스마트 컨트랙트, 금지 조치 가능”

- 암호화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브라이언 퀸텐즈(Brian Quintenz)위원이 16일(현지시간) ‘예측 및 베팅 플랫폼’으로 불리는 ‘이벤트성 사건’ 발생 여부에 베팅하는 스마트 계약은 공공이익에 위반될 수 있다며, 이 경우 CFTC는 해당 스마트 계약이 사용되는 플랫폼을 거래소에서 금지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밝힘
- 해당 계약이 CFTC의 관할 상품일 경우,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확인 코드를 통해 실행되는지와 상관없이 CFTC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강조

■ 민주·공화당, 블록체인 콩그레스 발족

- 23일 포브스에 따르면,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공동으로 미국 국회 내 ‘블록체인 콩그레스’(Blockchain Congress)를 발족
- 미국 투표권자 1,0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중, 암호화폐로 정치후원금을 지원하는것에 6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CCN, “향후 2년 내 미국 경제 침체 · 암호화폐 수요 급증”

- 23일 CCN이 JP모건의 데이터를 인용, 2020년 안에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은 60%, 3년 내 발생할 확률은 80%에 달한다고 보도
- 많은 경제학자가 향후 2년 내 시장붕괴와 함께 심각한 불황기가 닥칠 것이며,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중 국

■ 정부, 블록체인 심포지엄 개최...기술 응용 적극 확대

- 9일 중국 국무원 산하 공업정보화부(정보통신부 상당) 내 정보화·소프트웨어 부서가 베이징에서 블록체인 전문가 심포지엄을 열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

■ 금융당국, “인터넷 금융, 고객 거래 데이터 보존 및 보고 의무화”

- 증권일보에 따르면, 10일 인민은행(중앙은행), 은행 감독 관리위원회, 보험감독 관리위원회, 증권 감독 관리위원회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작성한 “핀테크 관련 업체 대상 반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조달 규제 방안”을 공개

※ 핀테크 관련 업체 대상 반자금세탁 및 범죄자금 조달 규제 방안

1. 반 자금 세탁·범죄 자금 조달을 위한 내부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2. 고객 신분 확인 절차 강화
3. 거래 및 출처 불분명 거래에 대한 당국 보고 의무화
4. 범죄 자금 관련 리스트 공유 및 관리
5. 고객들의 신분 정보 및 거래 자료 보관 의무화

■ 항저우 온라인 법정, “중국서 BTC 채굴기 거래 가능” 판결

- 항저우 온라인 법정에서 최초로 비트코인 채굴기 관련 분쟁과 관련한 재판 결과를 10일 발표
- 원고 : 중국 인민은행이 ICO를 금지했다는 것을 근거로 비트코인 전용 채굴기 거래는 위법이라 주장하면서, 7일 내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측에게 61.2만 위안(한화 약 1억원) 상당의 상품에 대한 환불과 지연이자를 청구

- 법원 : 현행법 상,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의 생산, 보유, 유통과 더불어 채굴기 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효화 할 순 없다고 원고 측 주장을 기각

■ 하이난성 공신청, 블록체인 기반 도시 계획 추진

- 하이난성(海南省) 공신청(工信厅) 부청장 천완신(陈万馨)이 “하이난성은 블록체인과 연관 있는 두 가지 계획을 준비 중이며, 디지털 경제(数字经济)와 디지털 하이난(数字海南)건설에 대한 것”이라 밝힘

일 본

■ 비트뱅크, 실시간 엔화 출금 서비스 개시

- 10일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뱅크(BitBank)가 사용자들이 일본 주요 은행을 통해 보유코인을 실시간 엔화로 출금
 - ※ 비트뱅크(BitBank) : 일본 은행들로 구성된 결제 네트워크 시스템 Zengin을 활용, 사용자들에게 은행과 거래소 간의 24시간 계좌이체 서비스 제공
 - ※ Zengin : 140명의 은행 전문가들로 구성, 도쿄 은행 협회가 운영

■ 국세청, 암호화폐 납세 신고 시스템 간소화 검토

- 18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 산하 세무위원회가 현재 시행 중인 암호화폐 거래 수익관련 납세신고 시스템 간소화 방안 검토
 - 납세자의 암호화폐 수익 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신고 절차를 표준화
- 일본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통해 얻은 이익을 ‘잡소득’으로 분류, 일정 금액 이상의 암호화폐 소득에 5%~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방안을 채택한 바 있음

■ FSA “단순 암호화폐 거래, 금융 활동 분류 여부 고민 필요”

- 일본 금융청(FSA)이 19일 ‘제7차 암호화폐거래소 세미나’를 개최, 암호화폐 거래 금융 규제 여부에 대해 논의
 - 단순 암호화폐 거래의 금융 활동 분류 여부와 금융 활동으로 취급될 경우의 규제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강조

■ 금융청 “하반기, 증권·무역 금융에 블록체인 본격 활용”

- 18일 일본 금융청이 제40회 금융심의회를 열고 일본 상반기 금융 산업 발전 현황 리뷰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발표

- 투자기관과 증권사 간 각종 업무 실험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무역금융 및 증권투자 분야에 본격적으로 활용 예정

■ 금융청, 거래소 ‘자율 규제 단체’ 인정

- 일본 지지통신(時事通信)에 따르면, 23일 금융청(FSA)이 ‘일본 가상통화 교환업 협회’를 자금 결제법에 근거한 자율 규제로 인정한다고 밝힘
- 암호화폐 레버리지 거래의 4배 상한 설정(기존 20배까지 가능)
- 자금 유출 예방을 위한 예금·국채 등 안전 자산 보유 등 포함
- ※ 일본 가상통화 교환업 협회 : 현지 16개 암호화폐 거래소로 구성, 자율적인 거래소 규정을 제정

EU

■ 증권감독기구, 2019년 암호화폐 시장감시에 100만 유로 투입

- 5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ESMA(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증권감독기구가 100만 유로를 투입해 2019년 암호화폐 및 기타 핀테크 활동에 대한 감시를 진행할 예정

■ 증권감독기구, ICO관련 규제 필요성 검토

- 증권감독기구(ESMA)가 8일 ICO규제 필요성과 미국의 관련 대응에 관해 검토
 - 스티븐 마이주르 ESMA의장은, ICO가 기존 규제에 어떻게 녹아들 수 있는지, 범세계적인 자금조달 분야 경쟁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 중이라 밝힘
 - ICO 중 일부는 금융상품과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금융 관련 규제 프레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임

■ 블록체인관측포럼, 블록체인 기업에 GDPR 준수 '팁' 제시

- 크립토베스트에 따르면, 16일 EU 산하 블록체인관측포럼(Blockchain Observatory and Forum)이 블록체인(분산원장) 스타트업이 EU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위반을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보고서를 통해 발표
 - 블록체인 기업들은 오프체인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프라이빗체인 및 규제 기관의 허가를 받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 포함

러 시 아

■ 원자력 공사, 제조 효율성 위해 블록체인 등 도입 추진

- 1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원자력 공사(ROSATOM)가 앞으로 블록체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3가지 신기술 분야에 중점을 두어 제조 프로세스(manufacturing process)의 효율성을 제고

■ 암호화폐 법안, 암호화폐·디지털 토큰 등 단어 제외

- 5일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러시아 하원의회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이 암호화폐 법안(Crypto Laws)에 암호화폐(cryptocurrency), 디지털 토큰(digital token)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암호화폐 채굴을 통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업(cryptocurrency mining)' 이라는 용어를 법안을 통해 정의할 예정이라 덧붙임

■ 러시아, FATF와 협력을 통한 암호화폐 시장 감독 강화

-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모스크바 최신 보고서에 행정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협력해 암호화폐 시장 감독에 나선 것으로 나타남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암호화폐 기술 특별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스(Dmitry Peskov)가 FATF와의 협력은 해당 산업의 고위험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며, 법의 규제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전면적인 법률 통과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힘

■ 텔레그램, 올 가을 TON 베타서비스 출시 예정

- 16일 현지 온라인 미디어 Vedomosti에 따르면, TON(Telegram Open Network)은 Durov개발팀이 새롭게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TON내에서 발행되는 토큰Gram의 트랜잭션 처리속도는 BTC와 ETH 네트워크 보다 빠르고,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card)에 견줄 수 있다고 밝힘

프 랑 스

■ FATF, 사법기관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제정 촉구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19일 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원조 등 암호화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폐거래소 및 관련 기업들은 규제 당국의 감독 혹은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성명 발표
- 암호화폐 남용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사법기관이 서둘러 관련 법률 제정 및 실질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

■ FATF, 내년 6월까지 첫 국제 암호화폐 규정 제정

- 19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내년 6월까지 암호화폐를 감시하는 방법에 관한 최초의 규정을 마련
- 204개 국가 사법 관할지역의 관계자들이 모여 암호화폐 관련 사안을 논의, 글로벌 범위의 암호화폐 관련 규정을 제정한다는 방침

몰 타

■ 몰타 금융청, 블록체인 산업 보호 위해 모니터링 기술에 투자

- 6일 CCN에 따르면, 몰타 금융청(MFSA)이 블록체인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블록체인 산업을 보호
 - 암호화폐와 관련된 고유의 위험이 몰타에서 최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

■ 암호화폐 중개인 시험 개최...응시자 대거 낙방

- 몰타 금융청(MFSA)이 오는 11월 1일 발효되는 '가상 금융 자산 법률(VFAA)'에 따라 암호화폐 중개인 시험을 개최
 - 250여 명의 회계사, 감사인, 기타 금융 서비스 전문가들이 시험에 응시했으며, 응시자 중 2/3가량이 시험에서 떨어짐
- ※ 가상 금융 자산 법률(Virtual Financial Assets Act)

참고자료

-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참고자료

[별첨]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 '18.06.27 금융위원회
 (시행 : 2018.7.10.일부터 1년간 시행예정(추후 연장가능))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

제1절 총 칙

-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에 관하여 ①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그 하위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②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이하 '자금세탁등')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의 준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음
 - (가상통화)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교환의 매개 또는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자적 방법으로 이전 가능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 각 호의 것은 이를 제외함
 1.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2. 상품권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 (가상통화 취급업소) 가상통화를 보관·관리·교환·매매·알선 또는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취급업소')
 - (금융회사등) 가상통화와 관련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특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고객과 이용자)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고객',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위해 취급업소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이용자'라 함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본인임이 확인된 이용자의 은행계좌와 취급업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에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
(‘17.12.28일 국무조정실 「가상통화 관련 관계차관회의」 보도자료 참조)
- (집금계좌) 가상통화 관련 거래를 위하여 취급업소가 이용자와의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 (기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의미는 특금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을 준용

□ **(적용대상)**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등을 대상으로 함

-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

제2절 취급업소에 대한 확인사항 등

☞ 이 절은 금융회사등이 특금법 제5조의2에 따라 취급업소에 대한 고객확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가.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의 고객을 취급업소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

- ① **(식별절차)**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 인지 여부를 식별하기 위한 절차를 운영

② **금융회사등의 취급업소 식별을 위한 준수사항**

- **(통계청 표준산업분류)**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다음과 같은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객이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 다음은 취급업소가 사업자로 등록한 업종의 주요 예시이므로 다른 유형의 다양한 업종이 있을 수 있음

1. 전자상거래 2. 소매중개업 3.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5. 통신판매업 등

참고자료

- **(정보공유체계의 활용)**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 간에 공유한 취급업소 현황을 취급업소 식별에 활용(→ 다. 정보공유체계의 운영 참조)
- **(금융거래의 유형)** 금융회사등은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고객이 취급업소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주의

1. 법인 또는 단체 고객의 자본금 규모 대비 금융거래 규모, 횟수가 과다
2. 심야시간(오전 0시~오전 6시)에 금융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
3. 단 시간내에 다수의 금융거래가 발생
4. 기타 금융회사등이 취급업소의 식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융거래유형

➡ 금융회사등은 식별절차를 통해 고객이 취급업소임을 인지한 경우 자금 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고려하고 나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

나.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의 고객을 취급업소로 인식한 경우

- ① **(고객확인 강화)**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고려*하여 취급업소에 대해 업무규정이 열거한 추가적 확인사항(업무규정 제42조제2항·제3항)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

* 금융회사등이 추가정보를 확인해 할 고객 대상인 ‘대량의 현금등가물 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에 취급업소를 포함(업무규정 제30조제3항 제4호)

1. 취급업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2. 취급업소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3. 취급업소가 이용자의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을 포함한 신원사항 확인 여부
4.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5. 취급업소가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6. 취급업소가 이용자를 상대로 가상통화는 법정 화폐가 아니라는 사실과 가상통화의 내용, 매 매 및 그 밖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 등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그 의사를 확인하는지 여부
7. 취급업소가 가상통화거래 관련 집금을 위해 임직원 계좌 등 별도의 계좌를 운용하는지 여부
8.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책의 준수 여부
9. 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추가적인 정보의 확인은 취급업소의 사무소, 영업점 등에 방문하여 현지 실사 방법으로 실시

② 취급업소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계좌를 개설*한 경우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금융거래 개시를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의하여 개설된 계좌로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

1. 취급업소의 임직원 계좌가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에 활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임직원 명의 계좌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및 금융거래모니터링 강화(나㉠에 따른 사항 포함)
2. 금융회사등의 고객 중 민법상 미성년자, 외국인 등의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를 식별
3.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 이용자의 금융거래내역 관리를 대행하거나 실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취급업소의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내역 관리에 편의성을 제공하는 용역 행위를 자제
4. 기타 금융회사등에서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계좌를 집금계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해당 계좌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가 발생한 경우 특금법 제5조의2 제2호 나목에 따른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고, '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따른 사항을 이행

- * (예시) 집금계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제출 요구 등

1. 제2절 가㉡에 따른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하는 금융거래가 발생한 경우
2. 취급업소의 가상통화거래 관련 집금계좌로부터 이체가 지속적으로 반복 되는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3. 기타 금융회사등에서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고객에 대한 지속적 확인)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를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고려하여 6개월 이하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

-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경우 3개월 이하의 주기마다 지속적으로 확인

다. 정보공유체계의 운영

- **(정보공유체계의 운영)** 금융회사등은 국내외에 소재한 취급업소 현황*을 금융회사등의 내부와 금융회사등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 (예시) 준법감시 담당부서와 사업 담당부서 간 공유

** 금융회사등이 인지한 취급업소 현황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업권별 협회를 통해 공유(업권 간 공유도 포함)

제3절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보고

이 절은 금융회사등이 특금법 제4조에 따라 의심되는 금융거래보고 (이하 '의심거래')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① **(주요 의심거래 유형)**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금융회사등의 고객과 취급업소 간 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심거래 여부를 판단하여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그 사실을 보고

1.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의 계좌로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은 없으나, 그 고객이 해당 취급업소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아 그 자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2. **(취급업소의 현금을 수반하는 금융거래)** 취급업소가 가상통화 금융거래와 관련된 취급업소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는 경우
3. **(분산 금융거래)**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다수 개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취급업소에게 송금하고, 일정기간 후 다시 해당 취급업소로부터 송금받아 그 자금을 다수 개인들에게 송금하는 경우
4. **(외환 거래)** 해외 송금 실적이 없으며, 컴퓨터와 같은 전산 장비 등의 수입 실적 또한 전혀없는 금융회사등의 다수 고객이 해외 법인 명의의 계좌에 전산설비 수입 명목등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5. (금융거래 액수) 금융회사등 고객의 1일 금융거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거나 7일 동안 합산한 금융거래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금융거래 금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고객확인 사항에 근거하여 볼 때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
 - * 금융거래 금액은 금융회사등을 통한 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며,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아님 (취급업소에 이미 입금한 돈으로 가상통화를 매매하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님)
 - ** 금융회사등이 금액을 산정할 때는, 동일인 명의로 입금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출금한 금액을 합산함 (예:500만원 입금 후 400만원 출금시 500만원으로 산정)
6. (금융거래 빈도) 금융회사등 고객의 금융거래 횟수가 1일 5회 이상이거나 7일 동안 7회 이상인 경우 (거래 빈도가 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고객확인 사항에 근거하여 볼 때 자금세탁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
 - * 금융회사등을 통한 입·출금 등 금융거래 기준이며, 취급업소를 통한 가상통화 매매가 아님 (취급업소에 이미 입금한 돈으로 가상통화를 매매하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님)
7. (분할 금융거래) 금융회사등 고객이 위 금융거래 액수 및 금융거래 빈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8. (금융거래의 주체) 금융회사등의 고객 중 법인 또는 단체가 취급업소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9.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취급업소가 취급업소의 실제소유자,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10. (기타)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배포한 의심거래 유형

② (의심거래보고사항) 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1. 보고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2. 보고대상 고객에 대한 특금법 상 고객확인 정보
3. 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4. 기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등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판단한 사항

참고자료

③ **(거래모니터링 강화)** 금융회사등은 가상통화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심되는 금융거래 행위를 식별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수행

○ 특히, 금융회사등은 취급업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은 계좌를 통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

1.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기존 의심거래보고기준 (Rule)에 근거한 모니터링 강화
2.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에 대해 새로운 의심거래보고기준 (Rule)을 추가적으로 수립할 것을 검토
3. 금융회사등의 고객 중 3년 내의 기간동안 고액현금거래보고 내역이 있는 고객과 취급업소 간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4. 가상통화관련 금융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인력의 지정
5.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하여 비정상적인 거래 유형에 특별한 주의
 - 가. 금융회사등 고객의 금융거래금액이나 금융거래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 나. 금융회사등 고객의 예금회전율이 예금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
 - 다. 금융회사등 고객이 국외에 소재한 취급업소에 해외 송금을 하는 경우
 - 라. 취급업소의 가상통화거래 관련 집금계좌로부터 이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등

제4절 내부통제

☞ 이 절은 금융회사등이 특금법 제5조에 따른 자금세탁등의 효율적 방지를 위해 이행하여야 할 조치를 정함

①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한 전사적 (全社的)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이사회, 경영진 및 보고책임자에게 다음과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고 준수

1. **이사의 역할과 책임**
 - 가. 경영진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정책에 대한 감독책임
 - 나. 자금세탁등의 방지와 관련한 경영진과 감사(또는 감사위원회)의 평가 및 조치결과에 대한 검토와 승인
 - 다. 기타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2.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 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정책의 설계·운영·평가
- 나. 내부통제 정책의 준수책임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 다. 자금세탁등의 위험성이 높은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를 개시 또는 존속할 경우 경영진의 승인
- 라. 기타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3. 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 가. 고객확인의 이행 및 의심거래보고 업무의 총괄
- 나. 내부통제 운영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그 결과와 개선사항을 경영진에 보고
- 다. 기타 가상통화와 관련하여 자금세탁등의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② **(감사 및 교육)** 금융회사등은 자금세탁등의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는 독립된 부서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 (독립적 감사)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

- 1.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부 정책의 주요 내용
- 2. 가상통화와 관련한 의심되는 금융거래의 유형 등
- 3. 기타 자금세탁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③ **(위험의 평가 및 관리)** 금융회사등은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등의 위험을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운영
- 특히,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을 평가할 때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취급

제5절 거래의 거절 등

☞ 특금법 제5조의2제4항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금융거래 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

-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해당 금융거래를 종료

참고자료

1.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신원확인, 실제소유자, 금융거래목적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2.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로서 고객이 확인을 위해 제공한 정보를 신뢰할 수 없어 사실상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해당 금융거래를 종료할 수 있음

1.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인 경우로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금융회사등의 고객이 취급업소인 경우로서 취급업소의 주소, 연락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취급업소의 휴업·폐업 등*으로 제2절 나ㄱ에 따른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원에 의하여 휴업·폐업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정

③ 금융거래 거절 및 종료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로 보고

④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를 종료한 경우 취급업소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수립

* (예시) 신속한 홈페이지 공시, 취급업소와의 가상계좌 정리방안 마련 등

제6절 제재 관련 사항

□ 특금법 제11조는 금융회사등이 특금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 조치 (시정명령,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요구 등)를 할 수 있음을 규정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금융거래 시 특금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

○ 제재 조치 중 시정명령의 유형과 예시는 다음과 같음

1. 시정명령의 유형

시정명령에는 금융회사등에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명령 (“작위명령”) 이외에 당해 법위반행위의 중지명령, 향후 위반행위 금지명령 등 금융 회사등에 소극적인 부작위를 요구하는 내용 (“부작위명령”)이 포함

2. 부작위 명령의 기준 및 예시

가. 행위중지명령

- (1) 법 위반행위가 최종적인 제재 처분전까지도 진행 중이거나 위반행위의 효과가 지속 되는 경우
- (2) 행위중지명령의 경우 관련 영업행위, 거래상대방, 위반행위의 내용 또는 방법 등 당해 위법사실을 최대한 반영하여 중지하여야 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시정조치 기간을 기재할 예정

<예시>

금융회사 ○○○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향후 ○년 (또는 ○○○의 위반 사항이 제거될 때)까지 가상통화취급업소인 ○○○에게 ○○○방법으로 ○○○의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년 이후의 위 행위는 새로운 법위반행위가 될 수 있다.

나. 행위금지명령

- (1) 행위금지명령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행위가 제재와 관련한 처분일 전에 이미 종료되었으나, 가까운 장래에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명함
- (2) 행위금지명령은 법 위반행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향후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위법행위가 아니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금지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여 처분할 예정

<예시>

금융회사○○○는 가상통화취급업소인 ○○○에게 ○○○방법으로 ○○○하는 금융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금융거래를 앞으로 다시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금융회사등에 대해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제7절 유효기간

- ☐ 이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로부터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적용

- 이 가이드라인은 연장할 수 있음

※ 참고 : 18.06.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BLOCKCHAIN 동향과이슈

〈암호화폐 중심으로〉

2018. 11월 제2호